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강 근 형*

— 목 차 —

- I. 서 론
- II.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성격
- III. 제2차 북한 핵 위기의 발발과 6자회담
- IV. 결 어: 평가 및 정책적 제언

I. 서 론

작년 11월 2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은 28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민주당의 케리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득표율에서 51%대 48%, 승리한 주의 수에서 31대 19, 그리고 일반 유권자의 득표에서도 300만표 이상을 더 얻었으며,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민주당을 압도함으로써 지난 2000년 대선에서의 시비를 불식시키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것은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미국민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강한 지도자”를 대통령의 제일 덕목으로 지적하였으며, “안보” 대 “경제”의 이슈 대결에서 미국민은 “안보”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더욱이 대외정책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원(외교위원회 및 국방위원회)을 장악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거에서의 재선임을 바탕으로 제2기 부시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테러전에서의 승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민주주의의 전파, 이라크 전쟁의 마무리, 그리고 북한 및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핵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6월 10일 한미정상회담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23)을 거치면서 남한의 중재노력에 힘입어 북한은 1년 이상 교착상태를 보여 온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7월 26일부터 제4차 6자회담이 북경에서 열리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성격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정권이다. 따라서 이들은 군사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힘의 우위”를 강조하고,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보다는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선호하며, 그리고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요새주의(Fortress America)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과 악의 대결로 국제관계를 보는 성향이 강하다.¹⁾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방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즉, 부시 행정부는 문명권과 비문명권으로 세계를 양분하고, 문명권에 대해서는 다자기구와 국제연대를 강조하는 다자주의적 정책을 취하지만,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 등의 비문명권에 대해서는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자주의를 추구하겠지만, 미국의 국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가

1) 이러한 부시독트린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논의로는 Michael Hirsh, “Bush and the World,” *Foreign Affairs*, Vol. 81, No. 5 (September/October 2002), pp. 18-43 참조.

차 없이 일방주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9·11테러 이후의 부시 독트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라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미국은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태도를 보였으나, 그러한 결의안의 결과가 미국의 국익에 정면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도 전쟁을 수행하는 일방주의적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2002년 9월 17일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방주의적인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수준을 가진 테러집단들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s)들에게서 온다고 보고, 이들이 미국 및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중단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면서 적들에 의한 적대적 행동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행동할 것(act preemptively)"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으로서 "절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들은 재래식 수단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²⁾ 이러한 무기들은 경고 없이 비밀리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사용하기 전에 선제공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역설한다.

이와 같이 제1기 동안 부시 행정부는 반테러와 반대량살상무기(WMD)확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제2기에 들어서면서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는 바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을 조장하는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불어넣어 이들의 폭정을 종식시키려는 데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월 20일 취임연설과 2월 2일 국정연설을 통해 앞으로 미국이 지향할 대외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 확산"과 "폭정의 종식"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1월 18일 당시 장관지명자로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행한 발언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와 확산정책에 위협이 되는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 국가로 이란, 쿠바, 북한, 미얀마, 벨로루시, 짐바브웨의 여섯 나라를 언급하였다. 라이스는 "이들 공포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17, 2002, pp. 13-16.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편히 쉴 수 없습니다”라고 역설하였으며, 이는 앞으로의 행동을 강하게 함축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 북한, 쿠바는 부시 대통령이 제1기 때에 언급했던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들에 속했던 국가들이며, 테러지원국 명단에도 올라 있어 자유의 확산 정책이 테러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올라선 미국은 자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온 세계를 하나의 “자유시장을 갖춘 민주공동체”로 만들어서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반민주정부를 타도했고,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좀처럼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온 세계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평화론”³⁾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인권을 중시하고, 정책결정이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는 전쟁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외정책의 핵심목표의 하나였던 제3세계에서의 민주주의 확산 정책도 민주주의 평화론을 기본 가설로 삼고 있었으나, 그 추진 과정이 다자주의와 경제지원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부시 행정부는 이를 위해 일방주의와 적극 개입을 선호하고 있어 더욱 공세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부시 행정부가 내세우는 민주주의 확산 정책은 이론상 자유주의 체보의 분석과 처방을 따르고 있으나, 그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선제공격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협상외교에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압박외교를 주저하지 않으며, 힘의 우위를 통한 물리적 처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3) 민주주의 평화론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ichael W.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pp. 1151-1169 ; R. J. Rummel, *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 Vol. 1: The Dynamic Psychological Field* (Beverly Hills: Sage, 1975) ; 이상우, 『럼멜의 자유주의 평화이론』(서울: 신아시아질서연구회, 2002), 제1부 ;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realism)’에 바탕을 둔 정책 스타일이라고 하겠다.⁴⁾

한편, 부시대통령의 세계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진 샤란스키(Nathan Sharansky)에 의하면, 현재의 세계는 자유사회(free society)와 공포사회(fear society)로 양분되어 있으며, 공포사회의 지도자들은 외부에 적을 만들어야 내부의 안정을 기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들 공포사회에 자유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⁵⁾

이와 같은 자유 확산의 아이디어가 현 부시 행정부의 네오 콘 세력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민주주의 증진 법안(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인 바, 이는 2005년 3월 3일 미국 상하원 법안으로 동시에 제출,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도 북한에 대해 자유와 인권을 확산시켜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민주화시키려는 의도를 강하게 담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은 상기한 “폭정의 전초기지” 국가들에 대해 자유와 인권을 적극 확산하는 정책을 구사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핵 폐기는 물론이고 인권 문제를 강조할 것이며, 북한이 6자회담들 내에서 핵 폐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김정일 정권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고찰해보기로 하자.

III. 제2차 북한 핵 위기의 발발과 6자회담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 선언으로 발발하여 1년 반 동안의 협상의 결과 1994년 10월 “북미기본합의(제네바핵합의)”를 이루어 냄으

4) 김태효, “미국의 자유의 확산 정책과 세계통치 문제: 정당성과 현실성의 기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1호 (2005), p. 85.

5) Nathan Sharansky, Ron Dermer, and Anatoly Shcharansky, *The Case for Democracy: The Power of Freedom to Overcome Tyranny and Terror*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김태효, 앞의 글, p. 81에서 재인용.

로써 타결되었던 것을 제1차 북한 핵 위기라 한다면, 2002년 10월에 발발한 북한 핵 개발 시도는 제2차 북한 핵 위기라 할 수 있겠다.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엄격한 상호주의'와 '검증'을 강조하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또한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발언은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북미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발표하여 개방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북한 해군의 남한 해군함정에 대한 침공 사과, 그리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추진 등 한국과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적극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이루어진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며, 핵과 관련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러한 약속의 대가로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의 형식으로 100억 달러 정도의 경제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북한의 정책 변화는 가중되는 경제난과 탈북자의 속출 등 변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물론 일본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경제적 지원이라는 실리를 얻고, 동시에 미국에 접근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 즉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무기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이는 미국의 대북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 명백했다. 더욱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매년 1-2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정보를 포착하고 있는 상황에서,⁶⁾ 북일관계의 개선은 미국 측으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미국

6) CIA, unclassified fact sheet for Congres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November 19, 2002. Gary Samore, "The Korean Nuclear Crisis," *Survival*, Vol. 45, No. 1 (Spring 2003), p. 12에서 재인용.

은 서둘러서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 측으로서도 북일관계의 개선이나 북한의 개혁, 개방의 성공의 열쇠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는 일본과의 수교도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북미양국의 이해관계로 2002년 10월 3일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평양 방문이 타결될 수 있었으며, 김계관 외교부 부상과 강석주 제1부상 및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켈리 특사는 핵과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위협에 관한 미국의 관심 사항에 대한 북한 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2002년 10월 17일자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켈리 특사가 강석주 제1부상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 의혹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강석주 제1부상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강석주 부상이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갖고 있다”면서 핵무기 이외의 다른 대량살상무기도 개발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⁷⁾

이와 같은 북한의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무기개발 계획의 시인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다시 긴장의 먹구름을 잔뜩 드리우게 한 것은 물론 북일관계의 교섭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1994년의 “북미핵합의(제네바핵합의)”는 무효가 된 것으로 보고, 2002년 12월부터 대북 중유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제네바합의를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북강경책을 통한 핵 개발 저지를 모색하였다.

북한은 제네바핵합의 이후에도 과거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해왔으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한 경수로 건설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다. 미국은 경수로의 완공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인도하기 전에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북한은 미국이 핵심부품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제네바핵합의의 위반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러한 양국간의 시각차와 불신이 제네바핵합의의 이행을 어렵게 해왔던

7) 『조선일보』, 2002년 10월 18일 참조.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2년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자주권 인정, 불가침조약, 북한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사를 천명하였다. 10월 28일의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 문제 관련 요구에 대해 선군정치와 민족자주 통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변하고, 선군의 배격 대상이 외세라고 한정하면서 민족공조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⁸⁾ 북한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핵 문제의 발단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전가하고, 미국의 압박에 대해 생존권과 자주권 차원에서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선택포기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표명했으며, 남한과의 민족공조를 통한 외세배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에 대해 미국은 “선택개발포기, 후협상”을 재확인했다.

한편,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서 “미국측이 연간 50만톤의 중유 공급을 12월부터 중단해 전력생산에서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됐기 때문에 핵동결조치를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핵동결 해제 선언이후 12월 22일 핵시설 감시카메라 무력화와 폐연료봉 봉인 제거, 12월 31일 북한에 상주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 추방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오다 2003년 1월 10일 마침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초 강수를 쓰기에 이르렀다.

2003년 1월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후 미국 내에서는 대북압박이나 선제공격이라는 강경책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부시 행정부내 온건파 주장의 강화로 부시 대통령은 대북강경자세에서 약간 선회하여,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에너지 및 식량의 지원을 포함한 “과감한 계획(bold initiative)”을 북한에 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마도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

8) 북한 외무성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대해서는 통일부, 『북한동향』, 제616호(2002.11.1.-2002.11.7.), pp. 3-5 참조.

한다면 미국도 일본과 대만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으로서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 핵 보유를 한다는 것은 악몽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미간의 협상을 서둘러서 중재했으며, 그 결과 2003년 4월말에 북경에서 북한, 미국, 중국 사이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이 성사되었다. 이 회담에서도 북한은 “선불가침보장, 후핵폐기”의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선행폐기”와 “다자간 협상”을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 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함으로써 북미간 핵 협상 타결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되었다.

비록 북경회담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으나, 미국은 양국간의 협상채널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다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하였다. 이처럼 대화의 틀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결하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적극화되었다. 요컨대, 2003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 다이빙궈(戴秉國)의 방북이 있었으며, 이어서 다이빙궈 부부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의사를 알리고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였다.

다이빙궈는 방북과정에서 북한에게 공식적인 북미양자회담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 다자회담 속에서도 비공식적인 북미양자회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북한이 수락하도록 설득하였다. 다이빙궈 부부장은 미국 방문과정에서도 중국이 북미사이의 정직한 중재자(an honest broker)로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러한 대화 방식에 응하도록 설득했음은 물론이다.⁹⁾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은 2003년 7월 31일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를 빌려,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한국의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도 북한이 6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하지 않고 러시아를 통해 6자회담 수용을 밝힌 사실은 북한이 중국을 대단히 불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이빙궈의 방북과정에서도 북한은

9) Philip P. Pan and Glenn Kessler, "U.S., North Korea Plan One-on-One Talks," *The Washington Post*, August 2, 2003.

노골적으로 중국이 미국 편만을 들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¹⁰⁾

결국, 북한이 그 동안 반대해오던 다자간 대화 방식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다자회담 성사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도 맞춤형 봉쇄, 경수로 중단 등 대북압박을 점차 강화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고립을 피하고 생존권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대화 이외의 카드는 없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북미양자회담보다 6자회담을 선호한 이유는 우선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혼자만 책임지지 않고 관련 당사국들과 그 부담을 나누어 가지려는 데 기인한 것 같다. 그리고 관련 당사국 모두 북한의 핵 폐기에 찬성할 것으로 보아, 북한의 핵 폐기를 유인하는 데 미국 단독으로서 보다는 5개국이 공동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간주했고,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도 대북 경제제재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압박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추정은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 미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타당하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하겠다.

2003년 8월에 열린 제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4단계 일괄타결 동시행동”¹¹⁾을 제시하였으며, “동결 대 보상”원칙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선택포기 후안보 우려해소와 북미관계정상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서로의 의사만 타진한 채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2차 6자회담에서는 7개항의 의장성명서가 채택되고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으나, 북한은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한 미국의 선적대서포기”와 일괄적 동시타결을 주장하였고, 반면 미국은 북한의 “선택폐기”를 강조하고, 특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10) 이 점은 James Brooke, “U.S. and North Korea Announce Accord on Wider Atom Talks,” *The New York Times*, August 2, 2003 참조.

11) 6자회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수석, “6자회담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재외동포의 통일외식』,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주최 2005 재외동포 통일문제 세미나 발표논문, pp. 15-40 참조.

1단계는 미국의 중유, 식량지원,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사 표명, 2단계는 미국의 불가침 조약체결 및 경수로지연보상, 전력손실보상, 북한의 핵시설 동결 및 사찰 수용, 3단계는 미국의 북미,북일 국교정상화, 북한의 미사일문제 해결, 4단계는 미국의 경수로 완성, 북한의 핵시설 완전 폐기이다.

(CVID)를 고집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미국의 CVID 원칙의 강조는 북미간의 불신의 골이 매우 깊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3차 6자회담은 2003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는데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진전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다는 점이 특징이다.¹²⁾ 한국 측의 아이디어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제안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바, 1단계는 준비단계로서 북한이 국제기구 감시하에 핵프로그램 동결을 문서로 확약하고,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북한에게 중유를 제공하며 북한은 3개월간 핵동결을 실시한다. 2단계는 문제해결단계로서 테러지원국 명단과 경제제재 해제 문제를 협의한다. 3단계는 포괄적 해결단계로서 북한의 핵 폐기 후에 북미수교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핵동결을 북한의 첫 번째 의무로 전제했지만 단계적 보상이 핵동결과 동시에 진행되는 해결 방식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3차 6자회담은 참가국간 합의에 의한 의장성명 채택, 실무그룹회의 운영에 관한 개념문건(concept paper)의 승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의지 재확인, 그리고 이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의 조기 이행 필요성이 강조되었다.¹³⁾

3차 6자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의 CVID 원칙에 입각한 북한의 “선택폐기”를 고수하였고, 북한은 “선택폐기”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특히, 핵 폐기의 범위에 있어 북미간의 인식 차는 심각했다.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에 의한 핵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능력의 폐기를 주장했으나, 북한은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만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평화적 핵은 계속 개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원자력에너지 이용 등의 평화적 계획은 자주적 권리에 속하고 국제법상으로도 합법적이라고 항변했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선택대신포기”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6자회담 재개가 더욱 불투명해졌으며, 2004년 10월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 제2기 부시행정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등으로 북미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12) 앞의 글, p. 19.

13) 같은 글, p. 20 : 외교통상부, “3차 6자회담 결과.” 자료집 (2004. 6.28) 참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보유 선언과 함께 6자회담의 불참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한 선언은 향후 협상에서 더 많은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수순일 수도 있다.¹⁴⁾ 북한의 핵 보유 의도가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핵 보유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북한은 체제안전뿐만 아니라, 내부통치, 외화가득, 대남전략적 우세 등 다양한 동기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북한의 강경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력 강화 조치와 함께 미국 내 네오 콘 중심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북봉쇄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매우 강화되었다.¹⁵⁾ 즉, 유엔 안보리 회부와 경제적 제재 등이 불가피하다는 대북 압박의 목소리들이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겠다.

북미간의 이와 같은 냉랭한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서둘러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며, 2005년 6월 1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는 선언에 양국정상은 합의했다. 미국이 6자회담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대북경제제재,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압박정책을 구사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자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중재 노력에 힘입어 부시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Mr. 칭호의 사용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북한에 대한 “주권국가” 발언이 이어졌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다자안전보장과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보였다. 그리

14)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태우, “북한의 핵보유 성명 이후의 정책과제,”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한반도 평화정착과 재외동포의 통일인식』, 앞의 책, pp. 3-12 참조.

15)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가 발간하는 격월간지 *American Enterprise* 를 중심으로 이러한 강경파의 주장들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고 한다. 홍관희,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분석과 전망,” 『국제이슈해설』, No. 64 (2005년 7월 19일), p. 2에서 재인용.

고 한국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북한이 요청한 식량 50만톤 전량을 북한에 보내주기로 결정하는 한편, “중대제안”으로 알려진 200만 kw에 해당하는 대규모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의를 북한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강경조치를 완화시키고, 회담복귀의 긍정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한국으로부터의 대북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6자회담 복귀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의 안전보장이다. 부시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주권국이며 독립국임을 인정했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여전히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이 진심으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평양의 입장이다.¹⁶⁾

- 북한 지도자 및 정치체제에 대한 비방 금지
 - 모든 경제제재 조치 해제 및 확산방지구상(PSI) 철회
 - 테러리즘 리스트에서 북한 삭제
 - 외교 및 상무관계 정상화
 - 2004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폐기
 - 남한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는 정전협정의 궁극적인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 이와 같은 북한의 요구를 4차 6자회담에서 미국 등 당사국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회담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26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부드러운 분위기로 회담에 임했는데,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개막연설에서 “미국은 사실상 북한 정부의 주권을 인정하며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종식을 향한 단계적인 과정을 존중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충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할 경우에 미국과 여타 참여국들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말 대 말, 행동 대

16) C. Kenneth Quinones, “The Six Party Talks and N. Korea’s Wish List,” KISON Newsletter, No. 580 (August 7, 2005) 참조.

행동"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하며, 북한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과 여타 당사국들도 똑 같은 준비가 되어 있기를 희망 한다"고 역설했다.¹⁷⁾ 한국의 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는 북한의 핵폐기시 200만 kw 전력 공급이라는 중대제안이 북핵 문제 해결의 한 축이라고 밝히고 이를 이번 회담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주문했다. 북한엔 핵을 포기하고, 미국 등엔 대북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조치를 취하는 최종 목표에 우선 합의하라고 촉구했다.¹⁸⁾ 즉 "선합의문발표, 후이행논의"라는 2단계 해결론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을 언급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나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여 북한 핵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 해석했으며, 핵보유국임을 내세워 6자회담을 핵 군축회담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했다. 또한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이런 북한의 주장들은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이 제시한 6자회담 합의문 최종 초안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 온 북한 핵에 대해 "북한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핵 폐기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핵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는 전력공급, 에너지 제공과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의 주권을 존중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¹⁹⁾ 이상의 문제들은 북미간에 어느 정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으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북한은 NPT체제 내에서도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고수한

17) Jim Yardley and Chris Buckley, "U.S. Reassures North Korean at Opening of 6-Party Talks," *The New York Times*, July 26, 2005.

18) 『동아일보』, 2005년 7월 27일.

19) 『조선일보』, 2005년 8월 3일.

데 반해, 미국은 그동안의 행태로 보면 북한은 평화적 시설물도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용해왔으며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결국 13일 동안 계속됐던 4차 6자회담은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문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3주 동안의 휴회를 선언하고 말았다. 특히, 북한은 경수로의 완공을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으로써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²⁰⁾

이번 4차회담은 궁극적인 완전한 합의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차원에서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의 범위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 특히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제4차 6자회담은 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만 합의한 채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IV. 결 어: 평가 및 정책적 제언

상기한 바처럼,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조장하는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불어넣어 이들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데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방주의와 적극 개입을 서슴지 않으며 공세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제2기에 들어서서는 “폭정의 전초기지”의 하나로 명명하고, 자유의 확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년 10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을 “대북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생존을 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핵무장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로 테러 집단에게 핵 물질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질 것이라고 보고, 어떤 수단을 써

20) 이 점은 미국 수석대표 힐 차관보의 회견문인 “Six-Party Talks Making Progress, But No Final Agreement Yet.” Washington File (August 4, 2005) 참조.

서라도 이를 억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누누이 밝히고 있다고 해도, 이를 신뢰하지 않으며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제로섬의 상황이 바로 지금 북미간의 관계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호불신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데 목표를 둔 6자회담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해왔다. 이번 4차 6자회담에서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대해 서로 상대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어 상호 합의할 수 없었다. 미국은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보아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명분을 이용, 핵무기를 다시 개발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따라서 6자회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제재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북압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주변국의 양해를 얻으려는 명분쌓기 용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은 6자회담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시간벌기 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1994년 제네바합의 이전에 핵무기 1-2개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이를 이용하여 조약한 수준이지만 핵무기 1-2개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3년 NPT 탈퇴이후 제네바합의로 동결되었던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여 8,000여개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하므로 핵무기 5-6개를 생산할 수 있는 3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²¹⁾ 따라서 북한은 최소한 6-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²²⁾

미국은 북한이 리비아식으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에 넘기는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북한의 끈질긴 핵 보유 의지로 봉아 파키스탄 모델 방식으로 핵정책을 밀고 가는 듯하다. 1998년 파키스탄이 핵 보유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에 미국에 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친미정책을 펴으로써 미국의 묵시적인 용인을 얻어낸 바 있다.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핵을 보유하

21) Gary Samore, *op. cit.*, p. 16 참조.

22)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February 25, 2005.

면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핵 보유를 자신의 체제안전보장의 궁극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포기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내걸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의 포기와 주한미군을 철수 등과 같은 조건을 내세워 군축회담으로 6자회담을 끌고 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금년 2월 10일 핵 보유 선언이후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즉 말에 는 말, 행동에는 행동으로 대처하면서 미국이 취하는 조치를 보아가며 하나씩 단계적으로 군축을 진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상호군축에 응해야 한다는 북한식 요구나 마찬가지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도 동북아시아에서 같은 무기를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먼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과는 정 반대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3주 휴회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은 견해차를 어느 정도 좁히게 될 것인가? 한국 정부는 4차 6자회담이 종료된 이후, “북한도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미국과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긴밀한 공조를 해야 할 한미양국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한미간의 틈새를 노려 6자회담을 더욱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와 북한은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핵 확산의 맥락에서 보다 테러리즘의 차원에서 보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에는 확산을 막기 위해 동결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9·11이후에는 테러리스트들에게 핵 물질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폐기”밖에 다른 양보는 없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이 핵 동결 이후 비밀리에 핵 개발해왔다는 점과 상기한 바의 북한의 끈질긴 핵 보유 의지로 보아, NPT 복귀와 IAEA사찰을 전제로 북한에게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하자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

다.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완전히 핵 폐기를 한 이후 약 10년 동안 별 문제가 없다면, 그 때가서 북한에게 평화적 핵 이용권리를 주는 방안을 제안해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한국의 200만kw의 전기를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여타 에너지를 제공한다면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그간 북한 핵 보유에 대해 애써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구사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해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모르는 체 하면서 대북경제협력과 교류에만 더 치중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교류 협력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종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미국, 일본과의 불협화음이 더욱 커질 것임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며, 북한은 계속 이러한 틈새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핵보유국이 된 북한의 압박에 질질 끌려 다녀야만 할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에 대해 “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협력은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6자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경제제재, 유엔 안보리 회부, PSI의 적극 추진 등 대북압박정책을 구사하려 할 것인 바, 한국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북한 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로지 대북포용에서 벗어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다음 6자회담에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등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도 이제 핵 보유로 체제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핵 보유가 일시적으로는 안전보장을 담보하겠지만, 그로 인한 고립으로 북한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북한 체제가 위태롭게 될 것은 명백하다. 오히려 핵 포기를 통한 국제사회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북한 경제를 살리고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된다.